

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 KTB 중국 1 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(변경 후: 다올중국 1 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)
2. 시행예정일: 2023 년 5 월 23 일
3. 변경사항:
 - 펀드명칭 변경
 - 운용전문인력 변경
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 -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(증권 대여 및 차입관련 투자위험 추가, 증권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항목 추가)
4. 상세 변경사항: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칭	펀드명칭 변경	다올 KTB 중국 1 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다올중국 1 등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요약정보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역: 조하진 부책임운용역: 한정숙	책임운용역: 한정숙 부책임운용역: 손하연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 트	-	2023.05.23 - 펀드명칭 변경(다올 KTB 중국 1 등주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→ 다올중국 1 등 주증권자투자신탁[주식]) - 운용전문인력 변경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역: 조하진 부책임운용역: 한정숙	책임운용역: 한정숙 부책임운용역: 손하연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(‘21.10.21 시 행)	가. 투자대상 <모투자신탁 주요투자대상> <채권>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 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	가. 투자대상 <모투자신탁 주요투자대상> <채권>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 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 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] 및 이와 동

		<p>증권은 제외한다]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<자산유동화증권>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나. 투자제한 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>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</u></p>	<p>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<자산유동화증권>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나. 투자제한 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>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현행과 같음)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</u></p>
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3.02.20 시행)</p>	-	<p>가. 투자대상 증권대여 및 차입 관련 주식 추가: 주 2.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 가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</p>

			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.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증권대차거래 위험 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('22.08.30 시행)	- 해지위험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다. 기타 투자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,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해지위험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 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 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개정 사항 반영 ('23.01.01 시행) 및 연금수령요건 정정	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수령요건: 55 세 이후 <u>10 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세액공제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	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수령요건: 55 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세액공제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 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

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. [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</u></p> <p>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. 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]</p> <p>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</u></p>	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
--	--	---

	<p>소득세법 시행령('22.02.15 시행) 개정사항 반영</p>	<p><u>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 <p>분리과세 한도: <신설>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: <생략> <신설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 만원 이내의 금액</u>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<u>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</u></p>	<p>분리과세 한도: <u>1,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가능(2023 년 1 월 1 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)</u></p> <p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: <현행과 같음>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 이내의 금액</u>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함. <삭제>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		<p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②<생략>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</p>	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②<현행과 같음>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'연금세제안내' 참조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'23.02.20 시행)	-	가. 요약재무정보 증권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항목 추가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('21.10.21 시행)	가. 신탁업자 신탁업자의 확인사항: <신설>	가. 신탁업자 신탁업자의 확인사항: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('22.08.30 시행)	(2) 임의해지 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2) 임의해지 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

		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원 미만인 경우 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('22.08.30 시행)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.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.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